

월요광장

문화도시 광주의 총괄건축가에게 바란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4월 총괄건축가를 위촉하며,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건축 기본법과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업무의 범위를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의 조정과 건축 정책에 대한 자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총괄과 조정 및 관리,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제도는 19세기 초 네덜란드가 최초 도입한 이후 유럽 전방에 퍼져나가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서울·부산 등으로 확산되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는 건축과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문화 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가 공공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는 민선 7기 들어 콘크리트 건물들이 성냥갑처럼 들어서는 회색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디자인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광주다운 도시계획에 나서고, 광주

아트 도시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재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과거에도 인본 디자인 도시를 선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성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광주 도시 공간을 일대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총괄건축가가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지역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도시 및 건축 전문가들의 협조 역시 필요조건이 된다.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나름의 소중한 경험을 쌓아온 지역 전문가들이 총괄전문가의 안착을 위해 도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한 총괄건축가 제도가 정착되고 그 성과를 시민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건축에 참가한 건축가와 일반 시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총괄건축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통합과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지역 도시 및 건축가들이 이 과정에서 상대적 박

탈감을 느끼거나 또는 불필요한 또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나 건축의 경관 및 디자인은 단기간에 변화될 수 없다. 또 성과 역시 모두가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 저마다의 원칙과 기준, 시각과 관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공감대를 얻는 건축 디자인과 도시경관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더 많이, 더 자주 보였으면 한다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단기간 성과만 바라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건축과 도시에 있어서 광주다운을 만들어 가는 방식을 고민하고, 총괄건축가가 이를 다듬어 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한다.

민선 7기 들어 '광주다운' 또는 '광주다운'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린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만의 개성, 고유성, 정체성, 역사성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원인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이야 한다는 의미다. 백화점만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광주만이 가지고 있고 광주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 광주의 경관을 위해 광주시와 총괄건축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기고

유해 화학 물질 배출량 조작, 시민 참여로 해결해야



주철현 변호사·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 위원장

와 공장 가동 중단 선언이 있었을 뿐 다른 기업들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량 조작 공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업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과와 책임을 지는 기업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공모 사실보다 생명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동안 기업이 저질렀던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로 옳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시민의 생명은 시민들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기관들과 기업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용서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주체들끼리 만들어 낸 책임 규명과 대책으로는 이미 깨어진 그릇에 의미 없는 물 채우기가 될 뿐입니다.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 배상 등의 모든 논의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화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기업의 잘못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환경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 배출량 조작은 기업의 노동자들과 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불과 몇 백만 원의 과징금과 말단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도의 처벌로는 재발 방지에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안전은 직접적인 손실보다 그 때문에 시민이 받아야

하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결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수 산단 일부 기업의 배출량 조작 사건은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을 우선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행정과 기업만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해 환경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상설적인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 과정 또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정당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 기업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의 장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배출량 조작 사건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수 산단 기업들이 시민들과 함께 불신의 위기를 상생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법조칼럼

노인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



이정훈 변호사

기가 힘들다. 필자의 어린 시절이었던 1980년대만 해도 동네 마을에는 노인, 즉 어른들이 참 많이 계셨다. 숫자가 많기도 했거니와 어른들은 모두 생활의 달인으로서 특기가 하나씩 있었다. 한 자에 능통하신 어른은 마을 아이들의 '훈장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탁월한 균형 감각을 가진 어른은 마을 내 갈등을 중재하는 '해결사' 내지 '심판'이 되어 주는 등 다들 마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나름의 역할을 하셨다.

의학의 발달 및 운동의 생활화로 60대 분들이 어느덧 분인과 사회가 이들을 노인으로 보지 않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 도심이나 외곽 가리지 않고 즐비해 있는 요양 병원 등 노인 복지 시설을 목도하고 나니 어른들이 마을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시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세대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 결과 노

인의 89%는 건강하다면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58%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면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다.

즉, 대다수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있다. 이 통계를 시사하는 바는 어른들을 시설이 아닌 마을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고민은 "마을" 중심의 복지 체계 개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점은 바로 경로당이다. 13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 광주의 면적을 살펴보면 약 500㎢로, 반경 300~400m마다 경로당이 하나씩 있는 셈이다.

기존에 있는 마을 경로당을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플루리' 거점으로 변모시켜야 하며, 어른들이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해 인근 어른들이 찾아가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 개발보다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의 편의 시설과 도로,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 시설을 보완하여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년으로 근무했던 풍부한 사회 경험을 토대로 동네 마을 역사 해설사, 문화 해설사를 하거나 동네에서 영유아 보육, 책 읽어주기하는 등 오히려 지역에서 요구하는 여러 사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이나 '집 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라는 그리스 격언이 있듯이 어른들의 경로당 지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지자체에서도 노인 문제에 무관심한 것만은 아니다. 광주 자치구 중 남구는 효사랑 남구를 내세우고 있고 노대동에는 노인 복지 타운이라는 큰 시설이 있다. 우리 모두 어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노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社說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파트 도시'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한 달 세 세 차례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분양가에 '광주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등장은 정당한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광주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160만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959만 원보다 무려 20.9%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분양된 아파트가 잇따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분양된 HDC 현대산업개발의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632만 원으로 광주 전체 평균에 비해 472만 원이나 높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신세계건설은 농성동에 3.3㎡당 평균 2367만 원의 '빌리브 트레

비체'를 내놨다. 고분양가는 남구로도 이어져 봉선동 '남양휴튼 엠비지'는 3.3㎡당 2375만 원으로 2주일 만에 또 다시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광주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서울 등 타 지역 '큰손'들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등 타 시도 사람이 광주 아파트를 거래한 건수는 2306호에 달했다.

이처럼 고분양가 현상이 계속되면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박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분양 보증 대신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광주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도 광주가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교통영향 평가나 건축 심의 등 인허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 거품을 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배원들 잇단 사망 노동체제 개선 절실하다

전국우정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40대 집배원이 또 숨졌다. 지난주 당진우체국 집배원 강모(49)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주위에서는 '평소 건강 문제에 이상이 없었다'며 과로사로 보고 있다. 이로써 올들어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된 집배원은 벌써 아홉 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로와 안전사고로 25명의 집배원이 숨졌다.

근로시간이 긴 우체국에서는 어김없이 사망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 집배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돌려줘야 한다. 2018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2017년 연간 근로시간은 2745시간이었다. 강 씨가 일했던 당진우체국은 무려 1년에 2952시간. 하루에 12.6시간을 일해야 했다. 우리나라 집배원은 대표적인 과로 직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책이 아주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연이어 과로사가 발생하면서 2017년에 우정본부 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실태조사에 이어 인력충원 권고안도 나왔다. 올해 상반기에 400명, 하반기에 600명을 늘린 뒤 2022년까지 2000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우편사업은 공공 서비스여서 정자가 난다고 요금을 올리기도 어려운 데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의 우체국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에선 정자를 내고 있지만 금융사업에선 흑자를 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법을 개정해 금융사업 수익으로 우편사업 손실을 충당할 수 있게 하거나 직접 재정 지원을 통해 인력 증원 등 노동 체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의 18대 왕이었던 현종의 실록에는 예송논쟁(禮訟論爭)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효종 사후 인조의 계비(繼妃)인 조대비의 복상(服喪)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벌였던 예법 논쟁이 그것이다. 일반적인 예송논쟁은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생모 또는 계모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어머니보다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어머니는 3년 상복을 입고 차남부터는 1년 상복을 입는데 장남은 종

했지만 여전히 파행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에 이어 경제정문화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마저 부정하며 국회를 볼모로 삼는 한국당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편으로 정문회의 명칭·의제 등에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는 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송논쟁' 데자뷰

서 어떤 논쟁이든 10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평가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썩음을 해야 할 만큼 그 문제가 중요했는지 묻게 된다. 그러면 서 어떤 논쟁이든 10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평가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문회의 대립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내 생각, 우리 진영만 옳다는 주장은 독단이다. 경이 불황과 취임남으로 민생은 막다른 벼랑에 내몰려 있다.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다시피 했던 조선은 결국 망국을 피하지 못했다. 오늘의 식물국회에서 300년 전 예송논쟁의 데자뷰가 느껴져 쓸쓸하다.

3개월째 접어든 '식물국회'가 개원은 /박성천 문화부부장skypark@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including title '光州日報', website 'The Kwangju Ilbo', and subscription rates.